



주간 통일정세

2013-1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軍간부 대동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5일 0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맞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인민군의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가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고 전함.
- **北 김정은, 군사학교 체육경기 이례적 관람(4/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맞아 군사학교 간 교직원 체육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체육경기 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영철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경희 당 비서,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이 전함.
- **노동신문 사진에 김정각 前인민무력부장 등장 눈길(4/16, 노동신문)**
 - 지난해 10월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우리의 국방장관)에서 물러난 김정각 차수가 북한 매체에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전함.
 - 1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날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김일성정치대학 간 체육경기를 관람한 소식을 전하면서 실은 사진에 김정각이 차수 계급장을 달고 김 제1위원장 바로 뒤에서 일어난 채 손뼉치는 모습이 포착됨.
 - 김정각은 지난달 3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할 때도 참석했으나 북한 매체에 얼굴이 나오지는 않았음.
- **北 해군사령관, 김명식 前동해사령관으로 확인(4/16, 연합뉴스)**
 - 북한의 김명식 전 동해함대사령관이 해군사령관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



됐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함.

- 북한 매체가 전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동행한 북한 인사들을 소개하면서 리병철(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다음에 김명식을 호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확인함.

● 北 노동신문, '金부자' 초상화 지켜낸 사연 선전(4/17, 노동신문)

- 조업 중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으면서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지켜낸 선원들을 칭송하는 '미담기사'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뒤늦게 실음.
-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평안남도 증산군 앞바다에서 파도를 만나 침몰한 'ㄷ-자-91885'호 선원 5명은 죽음의 순간까지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초상화를 습기가 새어들지 않게 보호하는 모범을 보임.

■ 김정은동향

- 4/16, 김정은 黨 제1비서, 4.15 평양시민들과 함께 '태양절경축' 은하수음악회 관람(4.16, 중통·중방)
 -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곽범기 등 동행 관람
- 4/16, 김정은 黨 제1비서, 4.15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 관람(4.16, 중통·중방)
 -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격식, 김경희, 김경옥, 황병서, 오금철(軍총참모부 부총참모장/경기 준비 보고) 등 함께 관람
 -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 육아원·애육원·초·중등학교·양로원·양생원의 원아들과 노인들에게 운동복과 학용품·식료품들 전달(4.15, 평방)
- 4/16, 김정은 黨 제1비서, 4.16 시리아 독립 67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4.16, 중통)
 - 박봉주 총리도 4.16 시리아 내각 수상에게 축전(4.16, 중통)
- 4/18, 김정은 黨 제1비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발휘한" 일꾼(박혜옥, 평양 능라1유치원 교양원) 등에게 '감사' 전달(4.18,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제15차 김일성화축전 폐막식, 4.19 김기남·양형섭 등 참가자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관에서 진행(4.19, 중통·중방)

나. 군사

● 北, '태양절' 미사일 발사 안해...열병식도 없어(4/15, 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인 15일 관측이 무성했던 대외 무력



- 시위 없이 내부 생일 행사에 치중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함.
-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를 전후로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등도 현재까지 발사하지 않고 있다고 군 당국은 밝힘.
- 애초 정부와 군은 북한군이 10~15일 무수단, 노동, 스커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옴.

- **北, 62년 '병진노선' 강조...국정목표도 김일성 모방(4/21,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병진의 승전포성 울리며 앞으로'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우리 혁명에서 병진이란 말은 깊은 역사를 안고 있다"라며 "1962년 카리브해 위기가 닥치고 미제와 주구들이 북진을 부르짖던 그때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제시했다"고 강조함.
 - 정론은 이어 "이렇게(병진) 하자면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국방에 돌려야 할 것이지만 조국보위에 완벽을 기하려면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더 큰 힘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간곡한 음성이 지금도 귓전을 울린다"고 덧붙임.

다. 경제

- **北, 농업부문 기층조직 '분조' 관리 강화 강조(4/18, 노동신문)**
 - 협동농장의 기층조직인 분조(分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분조관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재차 강조함.
 - 노동신문은 이날 '분조관리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제목의 글에서 "농업 부문 일꾼들은 분조관리제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이 사업에 품을 들여야 한다"며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농업근로자들 속에 깊이 인식시켜 모두가 그 강화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특히 "분조장 대열을 잘 꾸리고 지대적 특성에 맞게 분조수와 노력자수(인원), 토지면적을 바로 규정해주어야 한다"며 "그에 따르는 알곡생산계획을 알려주고 그 수행을 위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기계, 영농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며 분조 호상(상호) 간 알곡증산경쟁의 열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김일성 시대 '천리마운동' 발원지 부각(4/19,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당 신문은 29일 1면에 게재한 '강선이 지펴올린 증산투쟁의 불길은 온 나라에 타 번지게 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기업소의 강철생산 성과를 소개하며 "전체 인민이 최대의 마력을 내어 증산해야 할 때"라고 강조함.
 - 사설은 "강선에서 타오른 불길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 진군의 힘있는 박차"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핵무장해제와 제도전복을 꾀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전쟁책동과 '제재' 소동을 자립의 무쇠마치로 짓뭇개버린 역사적 장거"라고 주장함.



라. 사회·문화

- **北 태권도팀, 내달 호주 국제무술대회 참가(4/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다음 달 호주에서 열리는 국제무술대회에 태권도팀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함.
 -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호주 가라데연합의 대니 코르다노브스키 사무총장은 1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호주 멜버른에서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5회 국제무술대회에 북한의 태권도 선수 12~15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함.
 - 그는 "태권도 종목에만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은 행사 개막식에서 시범 공연을 선보이고 실제 경기에도 참가할 것"이라고 밝힘.

- **커피 '제3의 물결' 평양 상륙...北도 핸드드립 커피(4/18, 연합뉴스)**
 - 북한 평양에 핸드드립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커피전문점이 등장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조선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는 18일 단체 홈페이지에 평양호텔 전망대 레스토랑 옆에 문을 연 커피전문점을 6장의 사진과 함께 소개함.

- **북한 농민들, 가구 단위 도급제 시행 기대(4/19, 환구시보)**
 - 북한 농민들이 당국의 농업 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접경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19일 보도함.
 - 환구시보는 최근 북한의 태양절 연휴 기간 북·중간 최대 교역 루트인 랴오닝성 단둥(丹東)과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쪽 건설 현장 등을 답사한 르포 기사에서 이같이 전함.
 - 북한의 농업 부문과 자주 접촉하는 단둥의 한 인사는 "북한 농민들은 '가구 단위 도급 생산 정책'(토지 소유권은 집단에 있고 경영권은 개인이 갖는 제도)이 올해 실현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 **北, 국제대회 참가열...경기성과 대대적 홍보(4/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2013년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박영미 선수가 여자 자유형 48kg급, 황룡학 선수는 남자 자유형 60kg급 경기에서 각각 1위를 쟁취했다"고 소개함.
 - 아시아 1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8일부터 22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에 북한은 4명의 남자 선수와 3명의 여자 선수를 내보냈다. 이 대회에서 양정일(남)은 은메달, 서심향·한금옥(여)과 윤원철(남)은 각각 동메달을 받음.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이란 국제전시회에 원유공업성 대표단 파견(4/16, 조선중앙통신)**
 - 배학 원유공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원유공업성 국제전시회 대표단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리는 제18차 원유·가스·정제 및 원유화학 국제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16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번 대표단 파견은 북한의 상품을 해외에 소개, 대외무역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호관계에 있는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북한과 이란은 1980~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의 군사 협력을 비롯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여러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종전 이후에도 양국은 정치·경제·인도주의 분야에서 관계를 유지해 왔음.
- **北, 中 신종 AI 확산에 '촉각'(4/18, 노동신문)**
 -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우려를 자아내는 신형 조류독감 피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H7N9형 조류독감이 퍼져 커다란 국제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중국의 AI 확산 상황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상세하게 소개함.
 - 신문은 "현재 중국의 감소성과 안휘성, 상하이 등에서 근 50명의 H7N9형 조류독감 바이러스(바이러스) 감염환자가 확인됐으며 그중 11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한다"며 "유전자 등을 분석한 결과 H7N9형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병시 중태에 빠지기 쉬운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전함.
- **중국~금강산 유람선관광 잠정 중단(4/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한반도 긴장 국면의 여파로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과 금강산을 오가는 유람선 관광도 잠정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9일 전함.
 - 베이징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1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금강산 유람선 관광상품은 다음에 통보할 때까지 잠정중단된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이 전함.
- **북·중, 양강도 경제개발구 추진 협의(4/19,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 접경한 양강도에 경제개발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최근 중국 측과 협의했다고 길림신문이 19일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양강도 대외사업국 김경호 국장 일행은 며칠 전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양강도 김정숙군과 마주한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을 방문, 추라이푸 현(縣) 공산당위원회 서기와 회담을 진행함.
 -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신장, 연봉, 혜탄, 강안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마다 합자·합작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유치하는 양강도 경제개발구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 중국의 대화제의 수용...우다웨이 방북 가능성(4/10, 아사히신문)**
 - 북한이 중국과의 대화를 수용할 뜻을 피력함에 따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또는 그 상급 인사가 향후 북한을 방문할 전망이다라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함.
 - 신문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 미사일 발사태세를 보이는 북한이 중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이달 중순 표명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미국·일본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전함.
 - **北 "美와 군축회담...비핵화 회담은 없어"(4/20, 노동신문)**
 - 최근 미국과 대화 조건으로 '핵전쟁 연습' 중단 등을 요구한 북한이 20일 앞으로 군축회담은 있어도 비핵화 회담에는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밝힘.
 - 신문은 이날 '미국의 대조선(북한) 적대시정책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글에서 "최근 미국은 우리와의 '대화'를 입에 올리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와 미국 사이에 군축을 위한 회담은 있어도 비핵화와 관련된 회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北 '보스턴 테러 연계설' 비난... "테러반대 입장"(4/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미국의 일부 언론이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를 자신들과 연계시키는 '날조기사'를 썼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함.
 - 통신은 이날 '무엇을 노린 모략보도인가'는 논평에서 "최근 미국 보수세력의 견해를 대변하는 '월드네트데일리'(인터넷)가 보스턴 마라톤 경기시 발생한 폭탄폭발 사건을 우리와 연결시킨 허황한 날조기사를 보도했다"며 "언론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반공화국 나발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함.
- 나. 6자회담(북핵)
- **'대화제의' 비난 北, 미국에 "먼저 약속 지켜라"(4/17, 노동신문)**
 - 북한은 미국의 '대화제의'를 "기만의 극치"라고 비난한 데 이어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오히려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노동신문은 17일 전함.

- 신문은 이날 '미국은 제 할 바나 바로해야 한다'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우리의 핵동력 공업 발전과 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는 그 어떤 국제적 의무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해마다 '키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였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핵 선제타격 대상에 올려 공동성명 1항을 위반했다고 비난함.

● 北, 리비아 사태 교훈 강조... "핵무장만이 살 길"(4/18,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리비아 사태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회유 기만에 넘어가 자체의 무력강화 노력을 포기한 나라들은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리비아를 꼽음.
- 신문은 리비아가 미국의 위협에 맞서 비밀리에 독자적으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했으나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태도를 바꿨다며 이는 "미국과 엇서다가는 자기 나라도 이라크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4.16)】 '미국이 對北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대화는 우리(北)가 핵억제력을 충분히 갖춘 단계에 가서야 가능하다'며 대화 움직임 일축(4.16, 평방·중통)
- 미국이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고 침략적인 무장 장비들을 철수하지 않는 한 우리(北)는 군사적 대응도수를 계속 높여 나갈 것임.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 대화 원하면 모든 적대행위 사죄해야"(4/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6일 국내 일부 보수단체의 반북 퍼포먼스를 비난하면서 남한 정부가 모든 반북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함.
- 북한 최고사령부는 이날 남한 정부에 보내는 '최후통첩장'을 발표하고 "괴뢰 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감행한 모든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온 겨레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최후통첩' 남측 반응 맹비난(4/19, 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최후통첩'에 대한 남한 당국자들의 반응을 '악담'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반복 퍼포먼스를 비난한 최고사령부의 최후통첩에 대해 통일부 등 남측 당국이 "특대형범죄행위를 합리화해보려고 온갖 악담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조평통은 또 "천추에 용서 못할 대죄악을 비호조장하면서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격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역적패당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사죄 한마디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고 덧붙임.

- **北매체, 조평통 담화 최초문구 수정...본심 들켰나(4/19,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소개하면서 미국과의 핵전쟁 관련 문구를 최초 내용과는 다르게 전달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조평통은 18일 오전 10시 50분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적대행위와 북침전쟁책동이 계속되는 한 북남(남북)대화나 북남관계개선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조평통은 그러면서 "미국은 최신 핵전략 무기들과 장비들을 총동원해 우리를 위협했다. 마땅히 우리는 강위력한 핵타격 수단으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했다"며 "이번에 우리는 미국과 사실상 한차례의 핵전쟁을 치른 것이나 같다"고 말함.

- **北 매체 "4·19정신으로 통일 염원 앞당기자"(4/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9일 4·19혁명 53주년을 맞아 "남조선 인민들이 4·19의 정신으로 투쟁하면 통일된 강토에서 살려는 민족의 념원은 앞당겨 실현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함.
 - 통신은 이날 '살아있는 4월 인민봉기자들의 고귀한 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온 겨레가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한목숨 바친 봉기자들의 고귀한 념을 이어 미국과 반역세력의 책동을 짓부쉬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北조평통, 어나니머스 해킹 비난(4/20,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일 국제해커조직 '어나니머스'가 최근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한 사건의 배후에 남한 정부가 있다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얼마 전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한 우리의 여러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해커범죄집단에 의해 또다시 공격받는 사



건이 발생했다"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화국의 합법적인 인터넷 활동에 대한 엄중한 침해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 **北 "한반도 긴장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4/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반도(한반도) 긴장으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조선 민족"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이날 '조선반도 사태로 누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가'라는 논평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조선반도 정세격화로 우리가 그 무슨 '내부결속과 같은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힘.
 - 논평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국가건설을 총적목표로 내건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책동으로 걸음걸음 장애를 받고 있으며 현실적인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함.
- **北, 김장수 안보실장 발언 비난..."호전적 망발"(4/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0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호전적 망발을 늘어 놓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겠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공공연한 망발은 현 조선반도(한반도) 사태를 더욱 격화시켜 전면전의 불집을 기어이 터뜨리려는 도발적 악담"이라고 주장함.
- **北, 김장수 안보실장 대북 발언 이틀째 비난(4/21,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6면에 실린 논평에서 김 실장의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을 거론하며 "(김장수) 역도의 이번 망발은 우리를 자극하면서 북남 사이의 현 긴장 상태를 고의적으로 격화시켜 북침전쟁의 불집을 기어이 터뜨리기 위한 괴뢰들의 무분별한 흥계에 대한 뚜렷한 실증"이라고 비난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불허...정부 "매우 유감"(종합2보)(4/18, 연합뉴스)**
 -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추진한 17일 개성공단 방북이 북한의 방북 불허로 무산됐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장기화 국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밝힘.



- 北, 중소기업 대표단 22일 개성공단 방문도 불허(종합)(4/19, 연합뉴스)
 - 북한이 범 중소기업계 대표단이 추진해 온 '개성공단 22일 방문'도 불허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 측에 방문 신청을 통지했으나 북한 측이 거부 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으며 북한은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함.

■ 기타 (대남)

- 【北 軍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4.16)】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정은 사진이 붙은 모형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 관련 '예고없는 보복행동 개시, 군사적 시위행동이 즉시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정부당국의 사죄' 요구(4.16,중통·중방·평방) ※ 南 보수단체 회원들, 4.15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퍼포먼스 진행
 - 최고존엄을 훼손하는 만행이 괴뢰당국의 비호 밑에 벌어지고 있는 한 우리의 예고없는 보복행동이 개시될 것이며 대상에는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들과 부추기고 묵인한 놈들 및 해당 당국 기관, 부서들이 포함될 것임.
 - 천만군민이 최고존엄을 어떻게 받들고 지키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北) 혁명무력의 군사적 시위행동이 즉시에 개시될 것임.
 - 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크고 작은 모든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중지 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온 겨레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임.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안보리 P5 "북한-이란 NPT에 '심각한 도전'">(4/20,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P5)은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이란이 핵확산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핵보유국이기도 한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대표는 오는 2015년 개최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 앞서 이틀간 제네바에서 열린 예비협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 성명은 "지난 2월 12일 북한 핵실험과 이란의 지속적인 핵 활동 추구라는 상황을 맞아 P5은 비확산 체제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도전에 우려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음.
 - 또 핵확산을 저지하는 측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효과적인 안전장치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확산 체제가 직면한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2003년 NPT를 탈퇴한 북한은 올해 들어 3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이래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도발적 언동을 반복하고 있고, NPT 서명국으로 남아있으면서 에너지와 의료용으로 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주장하는 이란도 다른 한편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음. 아울러 성명은 중동에 비핵 지대를 설치할 것을 촉구
 - 한편, 이번 NPT 재검토회의 예비협의를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고, 차기 협의는 내년 프랑스 주재로 열림.

나. 미·북 관계

- <미국 "북한정권 해외 비자금 추적...발견 땀 차단">(4/15, 연합뉴스)
 - 대 북한 금융 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라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북한 김정일(전 국방위원장) 일가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음.
 -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코언 차관은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미국도 김정일 일가가 비자금을 어디에 숨겨놓는지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만일 그 비자금을 찾게 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김씨 일가가 이 자금을 쓸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음.
 - 그는 "김정일 전 위원장이 과거 스위스에 30억 달러 이상의 비밀 자금을



감춰냈다는 보도가 많았다. 이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비자금을 물려 받았을 것으로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 코언 차관은 지난달 18~22일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해 대북 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했음. 그는 북한이 '슈퍼 노트'라고 불리는 위조지폐를 제조유통시킨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이 얼마나 많은 위조지폐를 찍어 내는지 정확히 모르고 이 문제가 뜬한 것 같기는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위조지폐를 유포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이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미국은 올해 연말께 새로운 100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북한이 달러화를 위조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음. 코언 차관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가는 돈을 차단하는 것이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차원의 대북 제재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대북 제재를 조화시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흘러들어 가는 돈을 차단하려는 점이 다르다"고 소개했음.
- 또 "북한은 재래식 무기나 상품 수출을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것으로 안다. 주민이 식량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 사치품 수입에 엄청난 외화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음.
- 그는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대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음.

● <케리 "북한과 대화에는 의미있는 조치 필요">(종합)(4/15,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음을 재 확인하는 동시에,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의미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북아 3개국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케리 장관은 도쿄공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진정하고도 신뢰할만한 비핵화 협상에 열려 있지만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한 약속들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 케리 장관이 언급한 "의미있는 조치"는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등에서 북한이 공약한 비핵화 관련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케리 장관은 또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단결돼 있다는 것 하나는 분명하다"며 "이 점에 있어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북한의 위험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의 이웃 뿐 아니라 자국민들도 위협한다"고 말했다. 또 케리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강하게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고 부연했음.
- 케리 장관은 이어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이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



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케리 장관은 지난 12일 한국을 시작으로 중국을 거쳐 일본까지 이르는 동북아 3국 순방을 마무리했음.

- <케리 "북한과 대화에는 의미있는 조치 필요">(4/16, 연합뉴스)
 - 한중일 3개국을 순방하면서 북한 측에 대화를 제의한 존 케리 국무장관이 협상에 들어가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제했음. 그는 15일(현지시간) 귀국에 앞서 NBC 방송의 '투데이(Today)'와 CBS 방송의 '디스모닝(This morning)'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밝혔음.
 - 케리 장관은 "바른 환경에서 조건이 충족했을 때 적절한 협상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짓 협상(phony negotiation)'을 구실로 삼는 이전의 똑같은 사이클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상원의원 시절 동료였던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이 과거 민주당이나 공화당 행정부가 모두 협상에 나설 때마다 북한이 '돈을 들고 튀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다른 방식을 강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확고하고 나도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
 - 미국의 이전 행정부가 반복했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임. 그는 "북한이 국제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지 않는 한 협상이나 대화는 없다. 우리는 같은 사이클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그러면서 그는 "그(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가 미국이 제시한 의무를 준수한다면 우리는 모든 현안에 걸쳐 협상할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 <北 "韓美, 대화하려면 도발 중지·사죄해야">(4/18, 연합뉴스)
 - 북한이 18일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동원해 남한과 미국 정부에 대화를 바란다면 군사훈련 등의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음.
 - 이는 올 들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해온 북한이 대화를 위한 일종의 조건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을 낳아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됨.
 - 북한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모든 도발행위들을 즉시 중지하고 전면사죄하여야 한다"며 "1차적으로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성명은 "대화과 전쟁 행위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다시는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거나 공갈하는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정식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성명은 이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착오없는) 의지"라면서 "지속적으로 가중돼온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러한 핵공갈에 대처해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것이 우



리의 정당한 자위적 핵무력"이라고 주장했음.

● <백악관 "협상에 열린 자세...북한 핵포기 우선">(4/18,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이 '조건부 대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 협상에 열린 자세라면서도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백악관 풀(공동취재) 기자단에 따르면 조시 어니스트 부대변인은 이날 폭탄 테러가 발생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윌'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진정하고 신뢰있는 협상에 열려 있다"고 말했음.
- 어니스트 대변인은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북한 정권의 최근 호전적인 행동과 발언은 이와는 반대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비판
-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등을 통해 남한과 미국 정부에 대화를 바란다면 군사훈련 등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음.

● <케리 "북한 대화조건 수용불가"..'중협조' 강조>(4/19, 연합뉴스)

- 요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잘 분석해보면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구사하려 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음. 핵심내용을 요약해보면 지난 20년간 지속돼온 북한 핵문제의 패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과 향후 중국의 협력을 전제로 북한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정리
- 그는 18일(현지시간) 국무부 새해 예산과 관련된 설명을 하기 위해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대북 정책의 구상을 설명했다. 우선 그는 최근 북한이 제시한 북미 대화의 선결조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음.
- 그는 "미국은 진정하고 신뢰있는 협상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음. 북한이 핵무기 포기(renouncing) 및 핵프로그램 중단(discontinuing) 의무를 실질적으로 준수하려는 진지한 의도와 자세를 보여줘야 하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지킨다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 구체적으로 협상이 재개되면 남북한이 합의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북핵 6자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음.
- 미국의 목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과 협상이 진행된다면 9·19 공동성명 등에 포함된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 등도 협상 의제가 될 수 있음을 밝힌 셈임.
- 케리 장관은 아울러 "지난 20년간 쳇바퀴 돌듯 해온 이런 다이내믹을



바뀌야 한다"면서 이런 생각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확고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

-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보상협상→재도발→재협상을 거듭해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제고됐다고 비판적으로 평가. 케리 장관은 "이제 북한은 핵무장 차원에서 더 나아갔으며 더욱 위협해졌다"고 말했다.
- 아울러 중국도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재의 국면을 과거와 다르게 보고 있다고 평가했음. 케리 장관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전개
- 그는 "중국은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번 자신의 동아시아 순방 기회에 중국 측과 솔직하고 진지한 토론을 했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중국을 향해 지난 20년간 되풀이해온 패턴을 확실하게 바꾸자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새삼 부각시켰음.
- 북한의 핵공격 위협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던 지난주 한국과 중국,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그가 연일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미국도 조만간 대화를 재개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외교기는 보고 있음.
- 하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하는 것에서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별다른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반응이 많음.
- 케리 장관은 물론 미국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달리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라고 표현했음. 과연 얼마나 다른 정책이 나올지 향후 오바마 2기 대북 정책의 향방이 관심사가 되고 있음.

● <北 "美와 군축회담...비핵화 회담은 없어">(4/20, 연합뉴스)

- 최근 미국과 대화 조건으로 '핵전쟁 연습' 중단 등을 요구한 북한이 20일 앞으로 군축회담은 있어도 비핵화 회담에는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대조선(북한) 적대시정책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글에서 "최근 미국은 우리와의 '대화'를 입에 올리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와 미국 사이에 군축을 위한 회담은 있어도 비핵화와 관련된 회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 신문은 또 "더욱 노골화되는 미국의 핵위협 책동으로 정전협정이 백지화된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우발적 요소에 의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우리에게 비핵화를 조건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핵무장 해제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우리를 제압하자는 속심"이라고 주장했음.
- 이어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며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 애당초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노동신문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 협상에서 일방적인 북한의



비핵화 논의보다 핵보유국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까지 포괄하는 상호 군축을 의제로 내세우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됨.

다. 중·북 관계

● <중국, 북한에 '태양절 사절' 안 보낸 듯>(4/15,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의 최대 명절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축하 사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임.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태양절을 맞아 북한에 축하 사절을 보냈느냐는 물음에 "이와 관련한 정보가 없다"고 답했음.
- 화 대변인은 "중국은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반도의 비핵화 추진, 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관련국들이 상호 도발적 언행을 거두고 6자회담을 재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북한이 중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북중 관계는 냉각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임.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막 피력했지만 북한의 뚜렷한 행동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시급히 '중재 외교'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
-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아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중국이 태양절을 계기로 북한에 특사나 고위 당국자를 보내기에는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14일 인터넷판에서 중국 정부가 매년 태양절을 즈음해 북한에 제공해온 식량 지원을 올해는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음.

● <"중국~금강산 유람선관광 잠정 중단" <美방송>>(4/19, 연합뉴스)

- 최근 한반도 긴장 국면의 여파로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과 금강산을 오가는 유람선 관광도 잠정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베이징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1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금강산 유람선 관광상품은 다음에 통보할 때까지 잠정중단된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 이 유람선 관광상품은 다음 달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한 뒤 두만강 유역의 연지(延吉)를 거쳐 북한 나선과 금강산을 둘러보고 6월 4일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짜여 있음.
- RFA는 이 관광상품이 잠정 중단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연변(延邊) 지역의 중국 여행사들이 관계 당국의 통보로 육로를 통한 중국인의 북한 관광객 모집을 중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중 접경지역의 중국 여행사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각 지방 정부 여유국(관광국)의 통보에 따라 북한에 가는 중국인의 단체관광이 중단되고 있음.



● <북·중, 양강도 경제개발구 추진 협의>(4/19,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 접경한 양강도에 경제개발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최근 중국 측과 협의했다고 길림신문이 19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강도 대외사업국 김경호 국장 일행은 며칠 전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양강도 김정숙군과 마주한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을 방문, 추라이푸 현(縣) 공산당위원회 서기와 회담을 진행
-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신장, 연봉, 혜탄, 강안 등 4개 구역으로 나뉜 구역마다 합자·합작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유치하는 양강도 경제개발구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 추 서기는 이 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강도 경제개발구는 창바이 국가급 중점개발개방시험구역 및 변경경제합작구와 압록강을 끼고 마주하고 있어 양국의 지역 간 교류와 합작을 강화하고 쌍방의 지역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수준 제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공동으로 경제개발구 건설을 가속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소개. 중국은 그동안 창바이현을 통해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음.
- 창바이현에 기반을 둔 창바이경제개발구 변경무역 수출입총회사는 지난 2011년 북한의 조선신진회사와 공동으로 김정숙군에 있는 대규모 석영광산을 공동개발하는 협약을 체결, 채굴한 석영을 중국으로 들여오고 있음.
- 지난해 9월에는 김정숙군 인민위원회 김승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친선대표단이 창바이현을 방문, 자매우호결연을 했음. 당시 양측은 변경무역, 관광, 광산자원 개발, 노무 송출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김정숙군의 풍부한 석영과 산나물, 한방약재 자원 등을 공동발굴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한편, 창바이현과 접해 있는 김정숙군은 원래 신파군이었으나 1981년 김일성 주석의 처인 김정숙의 이름을 따 개칭됐으며 석영을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일·북 관계

● <일본 아베 총리 "북한, 핵무기 소형화 성공 못해">(4/20, 연합뉴스)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북한이 아직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아베 총리는 18일 오전 일본 민영방송인 니혼TV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근거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음.
- 이날 발언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뒤 미국 국방부와 정보 당국이 이를 부인하는 등 혼선을 빚은 상황에서



- 나온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국 국방부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음.
- 아베 총리는 18일 니혼TV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 "실제로는 말만 하는 건지, 행동을 취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곧바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며 "우선 압력과 경제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은 유감스럽게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위협은 커질 것이다"라거나 "(북한의 위기 고조 방식이) 이전보다 수위가 높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매우 젊고 경험이 없어서 위험하다"고도 말했다.
 - 한편, 일본은 18일 중으로 오키나와현의 자위대 기지 2곳에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이동·배치할 예정. 일본은 애초 2014년도 말 오키나와에 패트리엇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계기로 상시 배치 시점을 앞당겼음.

마. 기 타

● <반 총장, 펜타곤 첫 방문...북한문제 집중 논의>(4/19,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8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찾았음.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 펜타곤을 방문한 것은 처음임. 유엔 사무총장의 첫 미국 국방부 청사 방문은 최근 북한의 전쟁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사돼 더 주목을 받았음.
- 반 총장은 이날 펜타곤에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 마틴 텀프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해 말리, 소말리아, 시리아 사태 등 국제 현안과 유엔의 역할 등을 논의했음.
- 그는 또 보스턴 마라톤대회 폭탄테러에 대해 당국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익명을 요구한 한 당국자는 "이날 면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많이 논의됐다"면서 "판단 착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놓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논의가 집중됐음을 시사했음.
- 반 총장은 최근 워싱턴DC를 잇따라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존 케리 국무장관 등과 회동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지난 11일에는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한 뒤 "한반도에서 긴장이 지속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와 대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음.
- 또 같은 날 CNN방송에 출연해 이례적으로 한국어로 "모든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의 창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음.
-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국무부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만난 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 도전(direct challenge)"이라고 비판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을 경고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FTA 발효 1년, 과연 그 효과는?>(4/15, 월스트리트저널)

- 오바마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 협정의 무역 증대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2기 행정부의 야심찬 무역 정책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메시지와는 엇갈린 무역 관련 통계치가 발표되는가하면, 무역협정에 따른 지금까지의 효과를 두고 미국 재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음.
-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재화의 무역 규모는 양국에서 모두 증가했음. 항공기, 자동차, 와인, 콩, 오렌지 주스 등 협정 적용 재화의 경우 미국의 대 한국 무역 규모는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후 1년 동안 4.1% 증가. 한국의 상품 수출 규모는 10.4% 늘었음.
-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양국의 전체 무역 규모는 3.2% 감소. 미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폭은 한미 FTA 체결 후 오히려 확대됐음. 이에 대해 미 당국은 한국의 경기 침체와 미국의 가뭄 등 보다 거시적인 요인들을 원인으로 지목
- 미국 백악관 관리들은 한미 FTA 체결 후 조기에 거둔 성과는 자유 무역 협정이 자동차 등 글로벌 경쟁에 취약한 산업에 타격을 입히지 않고 미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음.
- 오바마 정부는 태평양 지역의 11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하는 자유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주 금요일에는 협정의 12번째 조인국이 되고자 하는 일본을 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토마스 도널런은 월스트리트저널 오피니언 칼럼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아시아 태평양경제공동체(APEC)포럼, 동아시아정상회담 등과 함께 동아시아 내 미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오바마 정부는 유럽연합(EU)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 베팅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 확대를 미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음.
- 드미트리야스 마린티스 미국 무역대표 대행은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한미 FTA를 통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말했음. 한국 역시 지금까지의 한미 FTA 결과에 대해 만족해 하는 모습. 김기환 주미한국대사관 경제 공사는 최근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가진 연설에서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득이 되는 협정"이라고 평했음.
- 재화 및 서비스 교역 규모를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이다.



2012년 양국의 무역 규모는 총 1,011억 달러에 달했음.

- 오바마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대 한국 수출 규모를 연간 110억 달러 가량 늘릴 수 있으며, 전면 시행 시에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 반면, 무역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의 무역 장벽을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전체적인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임.
- 한편,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과 철강 회사들은 한미 FTA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의 경쟁사들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앗아가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 및 경량 트럭에 대한 관세를 즉시 인하하는 한편,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는 2013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음. 그 결과 2012년 미국산 자동차의 대 한국 수출 규모는 51% 가까이 증가한 2만2,600대를 기록. 하지만 이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규모인 70만4,700대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치임.
- GM과 포드자동차, 크라이슬러의 로비단체인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의 매트 블런트 대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 자동차 업계에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음.
- 블런트는 한미 FTA 발효 후 한국 정부가 도입한 규제들로 인해 한국 내 미국산 자동차의 매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우려했음. 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이 그 예임.
- 이와 관련해 마란티스 미국 무역대표 대행은 미국 자동차 회사에 대한 대우에 관해 한국측에 우려를 제기했으며 협상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음. 한국 측 교섭 담당자들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음.
- 미국철강노조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지난 일 년 동안 미국의 무역역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 협정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 노조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린다 랜드로스는 "일 년이 흐른 지금 무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본격화된 원자력협상...4대 관전포인트 주목>(4/15, 연합뉴스)

-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 양국이 워싱턴에서 16일부터 이틀간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본 협상을 진행함. 핵심 사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히 협정 만료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1년 여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음.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최근 두 차례나 5월 한미정상회담 이전 해결을 언급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5월 정상회담을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정부 내에서도 원자력협정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아니지만 정상회담의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 전에 해결



- 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경우에는 2월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의회 처리 절차를 이유로 늦봄(5월)을 협상 시한으로 꼽았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연속 회기 9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의회가 개최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통상 반년 정도 걸림.
 - 미국에서는 원자력협정을 비준받으려면 핵확산평가보고서(NPAS)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 작성에도 1~2개월이 소요. 이런 처리 절차상 적어도 5월에는 타결돼야 순조롭게 의회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임. 그러나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8월을 협상 시한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음.
 - 한미가 협정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협정은 내년 3월을 끝으로 만료되고 이후에는 무(無)협정 상태가 됨. 일각에서는 이런 상태가 돼도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만큼 정부가 배수진을 치고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음.
 -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미간의 원자력 협력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기술, 설비, 재료 등을 협정 만료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됨. 다만 원전 재료인 농축우라늄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주로 들여오고 있고 원전 설비도 이미 갖춰진 만큼 당장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음.
 - 그러나 농축 우라늄을 실제로 원자로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미측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원전 시설이 고장 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원 기술을 가진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 핵심 기술이 여전히 미국산이기 때문에 원전 수출도 차질이 예상됨.
 - 이런 기술적 문제 외에 정치적인 파장도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동맹국인 한미 양국이 원자력 협상 사안도 타결하지 못하면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음.
 - 정부가 요구하는 재처리와 농축 권한에 대해 미국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2016년부터 포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재처리 권한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시각도 있음.
 - 반면 에너지 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원전의 연료와 관련된 농축 우라늄 농축 권한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현행 협정에서 재처리와 달리 농축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 등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음.
 - 촉박한 시간에 비해 한미의 입장차가 팽팽해 정부 인פק에서는 양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음. 양국 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는 우선 현행 협정을 만기만 1~2년 연기하고 계속 협상하는 방안이 거론됨.



- 또 미국의 사전 동의 범위를 현행 개별 사안에서 일정 시기나 특정 단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분위기가 한국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전향적인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
 -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2010년부터 공동으로 진행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음. 우선 10년간 진행되는 이 연구의 성과를 보고 재처리 문제는 논의하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임.
 - 이와 함께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핵 문제와도 관련된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문제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옴. 이럴 경우 해외 관련 시설의 지분 인수나 위탁 처리 등의 대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음.
 - 다른 정부 소식통은 "현재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방향이 열려 있다"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한미 양국이 그중에서 가능한 옵션으로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음.
- <박대통령 · 오바마, 내달 7일 백악관서 첫 회담>(4/16,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번째 정상회담을 연다고 백악관이 15일 발표했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5월 7일 백악관에서 박 대통령을 맞을 것"이라면서 "올해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양국 동맹의 성장과 폭, 깊이, 강도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 또 "양국 간 글로벌 협력 강화와 깊은 경제 유대관계, 양국 국민의 강력한 우정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카니 대변인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폭넓은 경제 및 안보 이슈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북한 위협 대응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두 정상은 또한 양국 간 경제 유대 관계의 강화와 양자 안보 협력의 증진 및 현대화 문제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또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빠지지 않도록 축에 끼는 핀)'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중심적 역할로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 방위비협상 임박...전담대사 내정>(4/16, 연합뉴스)
- 외교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전담 대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조만간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교부는 주미대사관 공사를 지낸 황준국 장관 특별보좌관을 방위비협상 전담대사로 내정했다고 한 소식통이 16일 전했다.



- 이 소식통은 "방위비대사는 정식 직제는 아니며 장관이 해당 임무를 부여하는 형식"이라면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나라와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는 미국은 방위비 협상 대사가 정식 직제로 별도로 있음. 양측의 협상대표가 정해짐에 따라 조만간 양국이 방위비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됨.
 -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음. 정부는 2008년부터 그 직전 해에 타결한 제8차 협정에 따라 연평균 8천억원 가량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음.
 - 제8차 협정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의 분담금 계산을 위해 한미 양국은 올해 중에 9차 협정을 체결해야 함.
 - 특히, 미국이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연방 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가 발효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미국측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거셀 것으로 관측됨.
 - 미국은 아직 구체적인 협상안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현재 40%대인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지난 2월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한미간의 근래(in recent years) 협상에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한국에 최소 50% 이상으로 분담률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음.
 - 정부는 50% 고정비율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외교부는 미군에 대한 면세 등 간접 혜택을 이유로 미측과 분담률을 보는 방식도 다른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는 한미동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 이에 따라 한미 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면 분담률 계산방식과 조정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 <한미 합참의장 "北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4/18, 연합뉴스)
-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템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18일 "한미 공동 국지 도발 대비계획에 따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 양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제37차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갖고 전 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지휘구조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음.
 - 이번 MCM 회의는 워싱턴에서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음.
 - 양국 의장은 공동성명에서 "동맹의 억제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한반도 방어를 위해 충분한 능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 정 의장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도전 양상과 도발 행위에 대해 한국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역내 군사협력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템프시 의장은 한반도 주둔 전력과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하고 변함없는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 양국 의장은 전자권 전환 준비가 '전략동맹 2015' 추진계획에 의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미래지휘구조가 굳건하고 지속적인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했다.
 - 이번에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의에 건의해 승인받기로 했다.
 - 양국 의장은 "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상호 안보 강화 뿐 아니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동맹의 항구적 임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연내에 추가 MCM을 개척하기로 합의했다. MCM은 한미 합참의장이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임.
- <한미원자력협상 2년 '시간벌기'...美반대 넘어설까>(4/19,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워싱턴에서 열린 6차 본협상에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료시한을 내년 3월에서 2년 정도 일단 더 연장기로 한 것은 농축·재처리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국간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벌기'의 의미가 있음.
 - 사용후 연료 재처리나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권리 확보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한 현 시점에서 양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이 이번 협상에서 재확인되면서 협상 시간을 더 갖는 방향으로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10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핵심 사안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입장이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2년간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제대로 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임.
 - 현행 협정이 2년 연장되면서 이제 관심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미국이 입장을 바꿀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음. 그러나 핵비확산 정책은 미국의 완고한 원칙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기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음.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재의 협정 연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폭탄을 일단 뒤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옴.
 - 일각에서는 양국이 2년간의 협상을 통해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권리도 보장하는 기술적인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음.
 - 이는 일정한 조건을 달아 재처리나 농축 권한 행사를 부여하거나 현재 진행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공동연구와 연계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지적임.
 - 이와 관련, 정부가 미국의 원자력산업계를 우군으로 확보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우회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



오고 있음.

- <美, 원자력협정 개정과 별도로 韓 원전수출 지원>(4/19,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현행 원자력협정을 2년 정도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이 협정 개정과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 양국은 워싱턴에서 사흘간 진행된 협상에서 현행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풀어야 하는 사용후 연료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 문제는 시간을 갖고 계속 논의하되 현재 협정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은 미국이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의 한 소식통은 "원자력협정 문제는 연장 방안을 포함해서 (다른 사안과) 패키지로 다루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16~18일 6차 본협상에서 '원자력협정 한시연장+알파(α)' 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 플러스 알파의 내용으로는 현행 협정의 규제와 크게 관련되지 않은 원자력 산업부분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 다른 정부 소식통은 "협상에는 크게 사용후 연료처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경쟁력 촉진 등의 세 분야가 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절차 등의 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 정부 안팎에서는 해외 수출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관련된 원자력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미국이 보장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프랑스 등의 경우 원전 수출시 핵연료 문제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세일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음.
 - 미국이 앞으로 핵연료 공급 문제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하면 연료 문제로 우리가 원전 수출 과정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원자력의 공급 측면에서 미국이나 다국적 농축 기업의 지분을 우리나라 기업이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과 관련된 미국의 핵심 설비 반출 절차를 기존보다 간소화할 가능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일각에서는 현행 협정이 원자력 연료인 우라늄 농축 문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국이 조건부로 이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음. 이는 가령 특정 방식의 연구 등에 한정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인 셈
 - 한미 양국은 이번 6차 본협상에서 협의한 내용을 갖고 내부 검토를 한 뒤 최종 조율 작업을 거쳐 원전 수출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한·중 관계

● <윤병세 외교, 24일 방중...대북정책 협의>(4/19,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4일 하루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19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윤 장관은 24일 베이징을 방문,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을 잇따라 만나 대북 정책을 협의할 예정임.
- 윤 장관은 또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장관은 대북 대화 제의 배경 등을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과 의지를 피력하고,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관측됨.
- 이 밖에도 윤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 개최 방안 등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음.

● <차대통령, 방미 후 중국 방문할 듯>(4/20,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한 뒤 중국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9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농림축산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중국 방문 계획을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20일 전했다.
- 박 대통령은 내달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 "중국에 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음. 양국 외교 당국은 현재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과 형식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기되면서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음.
-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 출범 후 주변 4강과의 정상회담이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진행됐으나 박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방문 계획을 먼저 언급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순서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4강 가운데 중국에 첫 특사를 보냈고, 지난달 20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취임 축하전화를 하는 등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한반도 위기속 日대사 '자위대 역할' 언급 논란>(4/17, 연합뉴스)

-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빌미로 일본이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주한 일본대사가 한반도 유사 시 자위대의 역할을 이례적으로 공개 언급, 배경이 주목됨.
- 벳쇼 고로(別所浩郎) 주한 일본대사는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반



- 도 긴급사태시 미 7함대와 함께 일본 자위대가 해로 확보를 위해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일단 주한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기지가 일본에 있다는 점에서 이 발언의 내용 자체는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분석
 - 주일미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신속대응 전력을 한반도에 보내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등의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련 기지는 모두 7곳이 있음. 벵쇼 대사가 말한 미국 7함대는 요코스카가 모항이다. 유사시 이곳에서 전력이 한반도 해역으로 전개됨.
 - 특히, 전시에는 유엔사 후방 기지도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7함대가 한반도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현재 일본 함정은 우리 군의 작전구역 내로는 진입하지 못함.
 - 벵쇼 대사는 "북한은 일본이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면서 선제 핵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일본, 한국, 미국 3개국은 긴밀히 공조할 필요 있다"고 말했음.
 - 그러나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계속되는 시기에 주한 일본대사 입에서 자위대 역할 확대와 관련된 언급이 나왔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음.
 - 굳이 이 시점에 민감한 사안인 자위대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 특히, 일본에서는 지난 10일 집권당인 자민당 간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후방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비슷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음.
 - 정부의 한 소식통은 "7함대에 대한 해로 지원은 상식적인 말"이라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와 협의한 바는 없으며 (역할 확대를 위해)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 편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음.

● <일본 총무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4/20, 연합뉴스)

- 우익 성향 정치인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일본 총무상이 20일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신도 총무상은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4월21~23일)를 하루 앞둔 이날 야스쿠니에 참배한 뒤 교도통신에 "개인 자격으로 참배했다"고 밝혔음. 그는 자신의 참배가 정권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상이 태평양 전쟁에서 사망했다"며 "정기적으로 참배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신도 총무상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이오지마(硫黃島) 수비대를 지휘해 미군을 상대로 '옥쇄작전'을 펼친 구리바야시 다다미치(栗林忠道, 1891~1945) 육군 대장의 외손자. 작년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참배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현 아베 내각은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를 개인 의사에 맡기는 한편 각료의 참배 의사와 참배 여부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기조. 신도 총무상은 일본이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약탈 도서를 돌려주기로 한 한



일도서협정에 반대했으며, 2011년 8월 한국의 독도 지배 강화 실태를 살펴보고자 울릉도 방문길에 나섰다가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바 있음.

- 2006~2007년 첫 총리 임기 때 야스쿠니 참배를 안 한 것이 '통한'이라고 밝혀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춘계 예대제때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 봉납만 하기로 했음. 이는 7월 참의원 선거 전까지 경제에 전념하고, 그 외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안전운전'한다는 기조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됐음.
- 한편,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이 각종 침략 전쟁 과정에서 숨진 이들을 추도하기 위해 만든 시설로,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음.

● <“윤병세 외교장관, 26~27일 일본 방문”>(4/20,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26일 일본을 방문, 양국간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 요미우리 신문은 윤 장관이 26~27일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중이라고 보도했음. 올 2월과 작년 12월 각각 출범한 한일 현 정부의 첫 외교장관인 두 사람은 부임 이후 처음 대면하는 것임.
- 두 장관은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간 한일관계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윤 장관은 이에 앞서 24일 중국을 방문,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을 잇달아 만나 대북 정책 등을 협의할 예정임.

라. 미·중 관계

● <中, 한반도 정세와 관련 '3가지' 입장 고수해>(4/15, 인민일보)

-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은 13일 가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 왕이 대변인은 중국은 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중국의 입장은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수호, 끊임없는 대화로 문제 해결을 고수하길 주장한다고 밝혔음.
- 또한,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피하고,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대화를 전개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여기며, 상호신뢰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영구적 안정을 실현해 나가길 촉구했. 아울러 중국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중국 6자회담 대표, 북핵 협의차 내주 방미>(4/19, 연합뉴스)
 -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내주 미국을 방문한다고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밝혔다.
 - 우 특별대표는 워싱턴에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 그러나 구체적인 방문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음.
 - 화 대변인은 "우 특별대표가 미국 관리들과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반도의 비핵화 실현 등과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마. 미·일 관계

- <"비핵화가 대화 전제"...미·일, 대북제재 이행 확인>(4/19, 연합뉴스)
 - 워싱턴을 방문중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8일(현지시간)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정세 등을 논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두 사람은 이와 함께 금융제재를 포함한 대북 제재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도 확인.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제재와 함께 미·일의 독자적인 제재에 서로 협력하고 중국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음.
 - 스기야마 국장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입장을 거듭 설명, 미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스기야마 국장은 회담후 기자들에게 "대화의 창은 항상 열려있지만 어디까지나 비핵화를 위한 대화다.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바. 미·러 관계

- <미-러 갈등 2라운드...'블랙리스트' 공방 확대>(4/15, 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인권침해자 '블랙리스트' 공방이 확대양상을 보이고 있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15일 미국이 발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난했음.
 - 이 언급은 양국 간 블랙리스트 갈등에 대한 푸틴 정부의 첫 공식 언급으로,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나와 긴장감을 높이고 있음. 도널런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고위 관리와 회담할 계획. 이는 오바마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첫 최고위급



회답임.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러시아 내정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라며 "이른바 마그니츠키 사건은 러시아 밖에서는 전혀 논의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 그는 또한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음.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미국이 블랙리스트 공방 탓에 이보다 중요한 여러 국제안보 문제를 등한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그는 "러시아와 미국이 많은 국제적 문제에 책임이 있고 여러 국제적 혹은 국지적 분쟁이 양국의 관계 개선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양국이 취하는 조치는 분쟁 당사국의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물론이고 해를 끼칠 수 있다"고도 했음.
 -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인권 침해자로 판정한 상대국 인사 18명씩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게 입국금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앞서 양국이 지난해 말 상대국을 겨냥해 각각 제정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킨 인권법의 실행 조치를
 - 미국은 2009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러시아인 인권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인사들을, 러시아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부당대우와 러시아인 인권 침해에 가담한 미국 인사들을 각기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음.
- <“러시아-미국, 이달 말 유럽 MD 협상 재개 예정”>(4/16, 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이 이달 말 한동안 중단됐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 계획과 관련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은 16일(현지시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전 크렘린궁에서 열린 톰 도널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의 회담을 통해 오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국 군사대표단이 회담을 열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 안토노프 차관은 "미국 대표단에는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도 참여할 것"이라며 "미국 측이 유럽 MD 계획에서의 변화, 특히 MD 4단계 사업 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음.
 - 그는 양국 간 MD 문제 협상 재개는 최근 이뤄진 양국 국방장관 간 전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됐었다고 덧붙였음.
 - 안토노프는 일단 미국이 대화 의사를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러시아엔 구두 약속이 아니라 미국 MD가 러시아의 핵 역지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란 구체적이고 명백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
 - 미국과 나토는 이란 등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에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러시아가 자국 핵전력 약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측 간에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러시아는 나토의 유럽 MD가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란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과 나토는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이 지난달 중순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유럽 MD 4단계 사업 포기를 발표함으로써 양측 간에 일단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음.

● <러시아, 美에 관타나모 수용소 조속 폐쇄 촉구>(4/17, 연합뉴스)

- 러시아가 17일(현지시간)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 러시아 외무부의 인권민주주의법치 담당 특사 콘스탄틴 돌고프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최근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지들과 경비원들 간의 충돌 사건은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이 수용소의 폐쇄 필요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 돌고프 특사는 앞서 15일에도 관타나모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수감자들에 대한 부당대우를 지적하면서 조속한 수용소 폐쇄를 촉구한 바 있음.
- 돌고프는 이날 논평에서 "미국 정부는 국제인권단체들의 수많은 권고를 받아들여 관타나모 수용소를 조속히 폐쇄하기 위한 효율적 결정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그는 또 10년 이상 이 수용소에 억류돼 있는 러시아인 수감자 민가조프에 대해서도 법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가조프는 지난 2002년 파키스탄에서 미군에 체포된 뒤 관타나모로 옮겨져 수감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혐의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는 지난 13일 일부 수감자들을 독방으로 재배치하던 도중 경비대원들과 수감자들 간에 충돌이 일어났음. 수감자들이 감시용 카메라와 창문을 가려 감시를 어렵게 하자 수용소 측이 일부 수감자들을 독방으로 옮기려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이었음. 수용소 측은 사건 후 일부 재소자들이 급조한 무기로 저항해 경비원들이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음.

사. 중·일 관계

● <아베 "쓰촨 지진 관련 최대한 지원용의">(4/2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 쓰촨(四川)성 지진(규모 7.0)과 관련, 중국 지도부에 위로의 뜻과 지원 의사를 표명했음.
- 아베 총리는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희생자와 가족에 대해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NHK가 전했다.
- 아베 총리는 또 "우리로서는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용의가 있다"



며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음.

-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 '현 단계에서 외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지만 앞으로 필요해지면 언제든지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 일·러 관계

● <일 총리 10년 만의 방러 ... 쿠릴 분쟁 실마리 풀까>(4/18, 중앙일보)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오는 28일 현지 총리로는 10년 만에 러시아를 찾을 예정. 일 언론들은 "아베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사이에 북방영토(쿠릴 4개 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모스크바 선언'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음.
- 쿠릴 4개 섬은 쿠릴열도 최남단의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구나시리),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의 4개 섬을 뜻함.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사이에 위치한 이 섬들은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차지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러시아(옛 소련)의 실효지배로 넘어갔음.
- 이후 양국 간에는 "4개 섬을 일괄 반환하라"는 일본과 "러·일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시코탄과 하보마이 2개 섬은 돌려주겠다"(56년 '러·일 공동선언')는 타협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러시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진전이 없었음. 2001년 당시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가 "일단 2개 섬을 돌려받고 나머지 2개 섬에 대해선 추후 협상한다"는 데 합의하기도 했지만 바로 유아무야했음.
- 이번 아베 총리의 방러가 주목을 끄는 건 새로운 타협안의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 아베는 지난 2월 모리 전 총리를 특사로 보내 푸틴의 의향을 탐색했음. "당신이 지난해 3월 아사히(朝日)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무승부를 지향한다'는 게 뭘 뜻하느냐"는 모리 특사의 질문에 푸틴은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지지 않는 '쌍방이 수용 가능한 안'"이란 답을 했음. 푸틴의 반응을 접한 아베도 "4개 섬을 다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란 판단을 굳혔다고 함.
- 아베의 측근 인사는 "2+1주권 카드가 새로운 절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일본이 시코탄, 하보마이 2개 섬을 받고 나머지 두 곳은 △쿠나시르=일본 주권, 러시아 공동개발 참여 △이투루프=러시아 주권, 일본 공동개발 참여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일본으로선 3개 섬을 넘겨받는 명분을 얻고, 러시아는 가장 경제성이 높고 면적이 큰 이투루프와 더불어 일본의 경제 지원이란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